

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(금융위)

□ 과제목표

-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, 취약계층 부담 경감,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 해소

□ 주요내용

- (가계부채 총량관리) 주택 담보 대출 비율(LTV)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(DTI) 합리적 개선, '17년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(DSR)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
- (이자부담 완화) '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, 단계적으로 20%로 인하
- (신용회복 지원)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'17년 중 적극적인 정리방안 마련·추진
- (대출채권 관리 강화) '17년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·매각 금지 법제화(채권추심법 개정) 추진
- (금융소비자 보호 강화) '17년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동일기능-동일 규제 체계 도입,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
- (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)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부터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('19년)

□ 기대효과

-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체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 안정적 관리
- 다양한 취약계층 부담 경감,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을 통해 가계의 상환부담 완화·권익 보호